전두환·미쓰비시 등 '공익소송' 뒤에 무료변론 자청한 광주 변호사들 있다

수천쪽 서류 검토에 후원금 내고 1인 시위까지
광주 명예 지키고 지역 현안 해결 발벗고 나서

"이상갑 변호사, 김정희 변호사를 비롯한 수많은 변호사가 함께 해주셨다. 전범기업인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무료 변론은 물론 2009~2010년까지 광주 상무지구 미쓰비시 자동차 판매점 앞에서 진행된 1인 시위까지…. 몇몇 변호사들이 돌아가며 땡볕 아래, 눈보라 치던 날 시민들과 함께 직접 피켓을 들었다. 분명히 말하건대, 이것은 단순히 무료로 소송을 대리하는 차원을 넘어선 것이었다."

이국언(50) 근로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 대표는 12일 광주일보와 통화에서 "일제시절 소녀들을 끌고 가 강제노동을 시킨 전범기업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사과를 받아내고 정당한 위자료를 받기 위한 소송 현장에는 늘 광주지역 변호사가 있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지역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은 지난 1970~80년대 광주·전남 시국·인권침해 사건의 중심에 홍남순 변호사가 있었다면, 지금은 민변 광주전남지부를 중심으로 한 변호사들이 지역 현안에 발벗고 나서고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전범기업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전두환 전 대통령을 상대로 한 사자명예훼손 고소사건, 전두환 회고록 배포금지 가처분신청 사건, 극우 인사의 무차별적인 5·18 왜곡 행위 대응 소송 등 광주의 명예를 다투는 소송 내지 공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소송에 이들 변호사가 자리한다는 것이다.

시민모임에 따르면 지난 2009년 3월 일제시절 강제징용 피해를 본 광주전남 할머니들을 돕기 위해 결성된 이 단체는 전범기업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총 3차 소송을 진행해왔는데, 여기엔 이상갑·김정희·정채웅·임태호·정인기·김상훈·임선숙·김정호·강부원·최목·오대한·홍지은·최정희·소병선·김현무·김정우·박지현·홍현수·이소아·정다은·박인동·이성숙 변호사가 무료로 원고 측 대리인으로 나서고 있다.

22명의 변호사는 무료 변론만으로는 마음이 가벼워지지 않았는지, 시민모임 측에 적지 않은 후원금을 정기 또는 부정기적으로 건네고 있다는 게 이 대표 설명이다.

5·18기념재단과 5·18민주유공자유족회 등 5월3단체, 고(故) 조비오 신부 유족 측이 전두환 전 대통령 부자를 상대로 이날 광주지법에 제기한 '전두환 회고록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에 원고 측 대리인으로 나선 김정호, 임태호, 홍지은, 정인기 변호사도 마찬가지다.

전두환 회고록 관련, 지난 4월 조비오 신부의 조카인 조대영 신부가 전두환 전 대통령을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광주지검에 고소한 사건도 강행옥·서애련·안순례·김영신 변호사들의 소송 지원이 있었다고 한다.

5·18 당시 계엄군의 무차별 진압에 맞서 시민군으로 활동한 광주시민을 '북한 특수군'이라고 왜곡하는 등 5·18을 끊임없이 폄훼하는 지만원이라는 인물을 상대로 한 민형사 소송에는 김현무·이소아·홍지은·강행옥·진용태·송수아 변호사가 힘을 보태고 있다.

김양래 5·18재단 상임이사는 "(변호사들에게) 겨우 밥값, 교통비 정도만 드린다. 그런데도 관련 회의에 빠짐없이 참석하는 것은 물론 수천쪽에 달하는 관련 서류를 일일이 검토한 뒤 열성적으로 소송에 임해주고 계신다"고 전했다.

이국언 대표는 "선배 변호사들이 사회 참여를 열심히 하다 보니 신입 변호사들도 꾸준히 지역 현안에 관심을 갖는 것 같다. 시민단체 활동가로서 우리 지역의 자랑거리를 꼽자면 전문직종의 사회참여 현상을 꼭 언급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광주 상무지구 미쓰비시 자동차 판매점 앞에서 시위하는 김정희, 이상갑, 김정호 변호사.(왼쪽부터) 〈근로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제공〉

5·18단체·유족, 전두환·전재국 상대 회고록 배포 금지 신청

2015년이후 소송 여전히 진행중
역사 왜곡 조속 판결 요청도

5·18단체 대표자들이 12일 오전 광주 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후 '전두환 회고록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5·18단체와 5·18유가족이 12일 '전두환 회고록' 출판과 배포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다. 이들은 "지난 2015년에 시작된 5·18왜곡 관련 민형사 소송이 아직도 진행 중이다. 불행하게도 판결이 지연되는 사이 다른 방식(전두환 회고록)으로 5·18을 왜곡하는 일이 계속되고 있다"며 사법부를 상대로 진행 중인 사건의 판결을 조속히 내려달라는 요청도 했다.

5·18기념재단은 이날 5월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 고(故) 조비오 신부의 조카인 조영대 신부와 광주지방법원에 '전두환 회고록의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5월 단체와 조 신부는 회고록 중 허위 사실을 바탕으로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 서술한 대목을 삭제하지 않고서는 출판·발행·인쇄·복제·판매·배포·광고를 금지하도록 법원에 임시처분을 구했다.

신청인들이 지적한 부분은 회고록 1권 '혼돈의 시대' 가운데 ▲5·18은 북한군이 개입한 반란이자 폭동이라는 주장(535쪽 등 18곳) ▲5·18 당시 헬기사격이 없었다는 주장(349쪽 등 4곳) ▲전 전 대통령이 5·18의 발단부터 종결까지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27쪽 등 7곳) ▲1980년 5월 21일 전남도청 앞 집단발포 직전 시위대의 장갑차에 치여 계엄군이 사망했다는 주장(470쪽) 등이다.

5월 단체는 관련 내용이 허위임을 입증하려고 '12·12 및 5·18 사건' 법원 판결문, 1980년 5월 당시 헬기사격 정황을 입증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안전감정서 등을 첨부했다.

전 전 대통령과 그의 아들 재국씨가 이를 어기면 1회당 500만원씩 배상하는 명령도 신청에 포함했다. 애초 신청인들은 재국씨를 가처분의 채무자로 고려하지 않았으나, 그가 회고록을 펴낸 출판사 대표인데다 법원의 명령에도 전 전 대통령이 가진 재산이 없다고 이행강제금 납부를 외면하는 경우를 고려해 포함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5·18재단 관계자는 "전두환은 회고록 저자로서, 그의 아들 전재국은 출판자로서 5·18민주화운동 및 관련자들에 대한 허위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신청인들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불법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앞서 올봄 전두환 자택 앞까지 찾아가 회고록 폐기와 사죄를 촉구했으나 그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그에게는 더이상 관용은 필요없다"고 강조했다.

5·18재단과 5월 3단체는 지만원(75)씨가 발간한 '5·18 영상고발' 화보 발행과 배포를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서도 법원에 함께 제출했다. 화보집에서 5·18 당시 폭동을 선동한 북한특수군으로 지목당한 '시민군 상황실장' 박남선씨 등 광주시민이 가처분 신청인으로 나섰다. 지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5·18 배후에 북한이 있다'는 주장을 펴왔고, 5·18단체 및 당사자와 민형사상 소송을 벌이고 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세월호 1차 수색 이번주 마무리

선체조사위, 오늘 조사 범위·휴대전화 감식 논의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가 13일 회의를 열고 조사 범위와 휴대전화 감식 방법 등을 결정한다.

선조위는 13일 오후 2시 목포신항만 공사에서 제5차 전원위원회 회의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위원회 운영 규칙을 확정하고 선체 조사 범위와 조사 대상을 논의한다.

선조위는 2014년 4월 15일 세월호 출항 후 4월 16일 침몰까지 상황뿐 아니라 청해진해운이 세월호를 인수한 후 2014년 4월 15일 출항 전까지도 조사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디지털 포렌식 조사를 민간 기관에 맡길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할지도 결정한다.

선조위는 전회 회의에 앞서 제2차 제1소위원회 회의를 열어 화물칸 촬영, 세월호 복원성 조사, 조타기와 조타 과실 입증 방법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김창준 세월호 선체조사위원장은 "이날 회의를 통해 내부 쟁점들을 좀 더 깊이 있게 논의할 것"이라며 "별정직 직원 채용이 완료되는 7월 초부터 본격적인 선체조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11일 만에 유골 한 점이 수습됐던 세월호 3층 주방에 대한 수색 작업이 추가 수습 소식 없이 마무리됐다. 지난 11일 세월호 현장수습본부에 따르면 수색팀이 지난 이날까지 주방 지장물 제거와 수색 작업을 했으나 추가로 유골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곳에서는 지난 9일 오후 사람의 것으로 추정되는 큰 크기의 뼈 한 점이 발견됐다. 식당과 맞붙어있는 주방은 내부에 펄이 많이 쌓여 있었으나 배식 구멍 등 칸막이가 곳곳에 설치돼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수습본부는 현재 3~5층 수색 구역 44곳 중 36곳의 1차 수색을 마쳤다. 단원고 학생 객실이 있던 4층은 수색을 완료했으며 3층과 5층도 오는 17일까지 1차 수색을 완료하게 된다.

수습본부는 진입로 확보와 실내 지장물 때문에 손길이 닿지 못한 공간을 이달 말까지 정밀 수색하고 미수습자를 모두 찾지 못할 경우 7~8월까지 화물칸을 수색해 미수습자 수색 작업을 완료할 방침이다.

/김한영기자 young@kwangju.co.kr

자전거 무단횡단 중학생 시내버스 치여 숨져

자전거를 타고 무단횡단을 하던 14살 중학생이 시내버스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광주동부경찰에 따르면 11일 오후 3시9분께 광주시 동구 계림동 산장입구 사거리 횡단보도에서 A(14·중2)군이 좌회전하던 지원 151번 시내버스에 치였다.

시내버스 운전기사 B(37)씨는 이날 광주고에서 홈플러스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A군을 친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머리 등을 크게 다쳐 근처 병원에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은 자전거를 타고있던 A군이 보행자 신호등이 적색신호임에도 기다리지 않고 건너가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김한영기자 young@kwangju.co.kr

층간소음 문제 시비 주먹질한 2명 입건

광주광산경찰은 층간 소음 문제로 시비가 붙어 서로 폭행한 혐의(상해)로 임모(44)씨와 윤모(50)씨를 입건, 조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1일 밤 9시7분께 광주 광산구 한 아파트 복도에서 서로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손가락 등을 깨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임씨는 아래층에 사는 윤씨가 층간 소음에 항의하며 초인종을 눌렀다는 이유로 주먹질한 뒤 윤씨의 손가락을 깨물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윤씨도 이에 대항, 폭력을 행사했으며 두 명 모두 술을 마신 상태였다고 경찰은 밝혔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금은방 손님 행세하며 귀금속 훔친 10대 조사

광주광산경찰은 손님 행세를 하며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훔친 혐의(절도)로 김모(18)군을 입건, 조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김군은 지난달 26일 오후 8시께 광주 광산구 A(여·67)씨의 금은방에서 금목걸이 1점(230만원 상당)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김군은 금목걸이를 업주에게 건네받고 이를 착용할 것처럼 시늉하다 재빨리 들고 달아나는 수법(일명 네다바이)을 썼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김군이 유흥비 등 용돈 마련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승복 입고 스님 행세 50대, 술자리서 흉기 휘둘러

쌍나팔

○…승복을 입고 스님 행세를 하던 50대 남성이 술자리에서 흉기를 휘둘러 구속될 처지.

○…12일 광주동부경찰에 따르면 A(50)씨는 지난 11일 오후 3시30분께 광주시 동구 대인동 길가에서 B(50)씨 등 2명의 술자리에 끼어들어 함께 술을 마시며 상대의 관상을 봐주다 "관상이 영 안 좋다"고 말하는 바람에 시비가 붙자 가방에서 흉기를 꺼내 휘둘러 B씨의 입술에 1㎝가량의 상처를 낸 혐의.

○…경찰 조사결과 동종 전과 32범으로 드러난 A씨는 지난 2014년 업무방해 혐의로 1개월간 수감생활을 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경찰은 A씨가 '반성을 하지 않고 재범의 우려가 크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

/김한영기자 young@kwangju.co.kr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1.매각물건의 표시 및 매각조건
<경매 1계>

사건번호	매각물건 물건번호	소재지 및 면적[㎡]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단위:원]	비고
[아파트]					
2017타경 1859	1	서구 상무버들로15, 212동 6층 601호 [유촌동,상무버들마을2주공아파트] 59.97㎡	아파트	163,000,000 163,000,000	
[단독주택,다가구주택]					
2016타경 21085	1	광산구 본덕동 164-1 357㎡	대	61,458,000	일괄매각.목록2지분매각
		광산구 마곡길10 99㎡ 부속건물 창고17.1㎡[1/3선양례지분중일부]	단독주택	61,458,000	
[연립주택/다세대/빌라]					
2016타경 16373	1	곡성군 곡성읍 읍내2길9, 나동 3층 303호[대정연립주택]68.04㎡[정일두,정순자,36/144,한재년,한정엽,한인순,한재동9/144,정기현8/144각지분전부]	연립주택	46,000,000 46,000,000	지분매각
[대지/임야/전답]					
2016타경 23142	1	화순군 동면 서성리 562-12 1㎡	잡종지	2,526,000	일괄매각
		동소 567 96㎡	임야	2,526,000	

사건번호	매각물건 물건번호	소재지 및 면적[㎡]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단위:원]	비고
[상가/오피스텔,근린시설]					
2016타경 21702	1	북구 오치동 922-19 176.6㎡	대	131,028,330	지분매각.일괄매각.제시외건물포함.문흥귀1/2지분전부
		북구 우치로275번길 6-3 1,2층각104.04㎡ 3층90.65㎡ 제시외 창고 등 51.43㎡	외국어학원	131,028,330	
[기타]					
2016타경 23142	2	화순군 동면 서성리 562-16 646㎡[14/70문종대지분전부]	잡종지	3,488,400 3,488,400	지분매각

● 공고된 부동산의 면적 표시는 실제와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매각조건
①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해야 하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매각이 불허가 될 때에는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이를 배당시 매각대금에 산입한다. 불법행정 변경으로 인한 원상복구가 필요한 경우 매수인이 이를 부담할수 있음.
② 공유자가 민사집행법 제140조에 의한 우선매수신고를 한 경우 그 매수신고 후 최초로 진행되는 매각기일에 매수보증금의 미납으로 실효되는 경우 그 공유자는 그 이후 해당 부동산의 매각기일에서는 우선 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당해 기일에 다른 매수신고인이 없는 경우 최저매각가액을 공유자우선 매수신고액으로 본다.
2. 매각기일 : 2017. 6. 27. [화] 10:00
3. 매각결정기일 : 2017. 7. 4. [화] 16:00
4. 매각장소 : 광주지방법원 입찰법정
5. 매각방법
① 입찰법정에 비치된 기일입찰표에 사건번호, 입찰자의 성명, 주소, 입찰가격, 보증금액 등을 기재하고 날인하여 보증금을 함께 입찰봉투에 넣어 입찰함에 투입하면 됩니다. 매수신청의 방법으로는 최저매각가격의 1할[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발행의 자기앞수표 또는 현금을 준비하거나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일명 보증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입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입찰자목록에 각자의 지분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③ 입찰봉투의 투입이 완료되면 곧바로 개찰을 실시하여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을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정하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입찰자들만을 상대로 추가입찰을 실시합니다.
④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제외한 다른 매수신청인들의 매수신청보증금은 입찰절차가 종결되는 즉시 반환합니다.
6. 매각허가 및 대금납부
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에 대하여 매각결정기일에 매각허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금지급기한은 통상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지정됩니다.
② 지정된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재매각을 실시합니다. 다만, 재매각기일로 지정된 날의 3일전까지 종전 매수인이 매각대금 및 지연이자, 비용을 납부하면 대금납부로서 유효하며, 따라서 재매각은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7. 소유권이전 및 인도
① 매각대금을 납부함으로써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며, 각종 저당권, 가압류등은 순위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소멸됩니다. 소유권이전등기 및 저당권이나 가압류의 말소등기를 위해서는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한 후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등록세영수필통지서를 첨부하고, 국민주택채권발행번호를 기재한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이 위 등기를 촉탁하여 줍니다.
② 매각대금을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소유자 또는 대항력없는 부동산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하여 주지 아니하면 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8. 주의사항
① 매각된 주택 또는 상가건물에 최선순위의 저당권 등이 설정된 날짜보다 먼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나, 사업자등록신청을 마친 임차인이 있을 때에는 그 임차보증금을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② 일반인들의 열람에 제공하기 위하여 매각기일 1주일 전부터 매각물건 명세서, 현황조사보고서 및 평가서의 사본 등을 우리법원 민사집행[신청]과에 비치하여 열람에 제공하고 있으므로 미리 필요한 정보를 얻으신 후 입찰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③ 특별매각조건의 내용은 매각물건명세서의 열람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입찰법정에 나오실 때에는 입찰표의 기재 및 입찰보증금의 반환에 필요하오니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오시기 바라며, 타인의 대리인으로 입찰하려고 하는 사람은 인감증명을 첨부한 위임장을 반드시 입찰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⑤ 소유권이전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요구되는 농지의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결정된 후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여야 매각이 허가됩니다. 단,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에 의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지 않음이 소명된 경우에는 매각이 허가될 수 있습니다.
⑥ 공고된 물건중에 매각기일 전에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집행이 취소·정지된 경우, 또는 매각기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도의 공고 없이 입찰에서 제외됩니다.
⑦ 신문에 공고되는 물건은 최초의 매각기일에 해당되는 물건이며, 속행사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문공고를 하지 않으므로 우리법원 게시판의 공고나 법원에 비치된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⑧ 매각대금을 납부하기 전까지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면 매각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매수신청인이 제출한 매수신청보증을 반환합니다.
매각기일 공고의 요지는 대한민국 법원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주소 : http://www.courtauction.go.kr[경매공고 → 매각공고 선택]
※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공고내용외의 열람 가능한 정보는 법률상 제공하도록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을 국민편의를 위하여 따로 제공한 것으로서, 혹시 그 중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매각불허가 신청이나 항고, 대금감액신청이나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관심있는 물건에 관하여는 반드시 법원에 나오셔서 게시된 매각기일의 공고나 비치된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직접 확인하신 후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2017. 6. 13.

광주지방법원 사법보좌관 형남곤